
'13년도 업무계획

I. 일반현황	1
II. 주요정책 추진계획	6



국가기록원



일 반 현 황

1

연 혁

- 1969. 8 : 총무처 소속 정부기록보존소 설치
- 1984. 11 : 부산지소(현, 역사기록관) 설치
- 1998. 7 : 정부대전청사로 본소 이전, 서울사무소 설치
- 2004. 5 : 국가기록원으로 명칭 변경
- 2007. 12 : 나라기록관(성남) 준공, 대통령기록관 설치
- 2012. 8 : 대전기록관 준공

2

주요 기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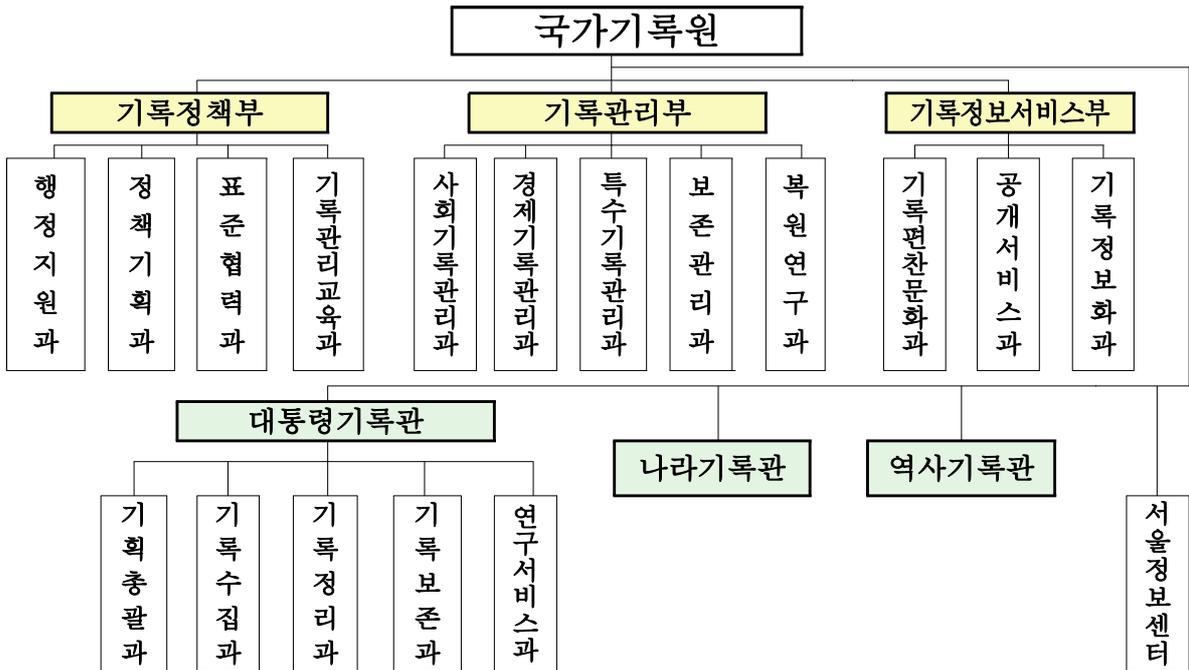
-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
- 공공 및 주요 민간·해외 기록물의 수집·보존·평가
- 기록정보자원의 편찬, 콘텐츠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
- 대통령기록물의 보호·보존 및 활용 등 효율적 관리
-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지도·지원·확인·점검·교육 및 평가

< 국가기록관리 개요 >

- ▶ 국가의 기록관리는 헌법기관별로 별도의 기록물관리기관을 통해 수행
 -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 정책 및 법령·제도 총괄
 - ▶ 정부기록물은 보존기간에 따라 각 행정기관과 국가기록원이 보존 분담
 - (보존기간 10년이하) 행정기관이 직접 보존·관리
 - (보존기간 30년이상)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 보존·관리
- ※ 국가기록원으로 매년 20여만권(전체 기록물 생산량의 약 10%) 이관

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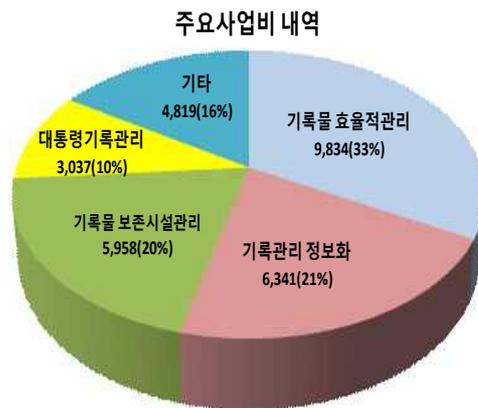
기구 및 인력 : 3부 3관 17과 1센터, 334명



4

'13년 예산 현황 : 485억원

구분	예산액 (백만원)
총계	48,542
인건비	17,507
기본경비	1,046
주요사업비	29,989



5

소관 법령 : 법률 2개, 시행령 2개, 시행규칙 1개

-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- 「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

6 소장 기록물 현황

(12.12.31 기준)

○ 4개의 보존서고 운용, 총 서가길이 380.8km 중 135.9km(35.6%) 사용중

※ 나라기록관(성남), 역사기록관(부산), 대전기록관 및 대전본원 서고

< 공공기록물 >

(단위 : 천)

연도 내용	소 장 량 (누계)	주요 내역
문 서(권)	3,218	조선, 일제시대, 정부수립이후 문서 등
도 면(매)	835	지적·임야(원)도, 광구도, 기상도, 설계도 등
카 드(매)	291	인사기록, 병적기록, 공무원연금카드 등
시청각기록물(점)	2,450	사진, 녹음·녹화테이프, 영화필름 등

< 대통령기록물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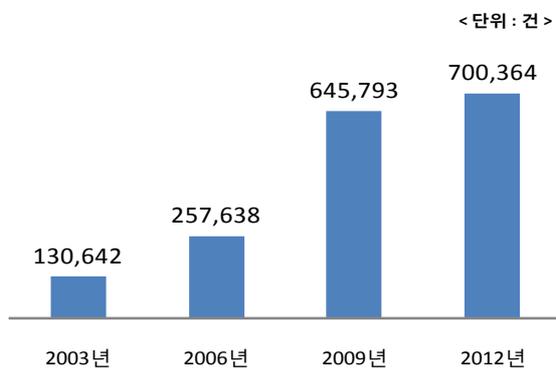
(단위 : 천)

합계 (건)	문서		시청각 (전자+비전자) (장/건)	행정박물 (선물 포함) (점)	행정정보 데이터세트 (건)	웹기록 (건)	간행물, 도서 등 (권/개)
	비전자 (건)	전자 (건)					
8,774	921	739	853	12	689	5,530	30

※ 제17대 대통령기록물 미포함

7 기록물 열람 현황 : 70만건

○ 행형(行刑)기록(판결문, 수사기록), 재산관련 기록(지적도, 토지조사부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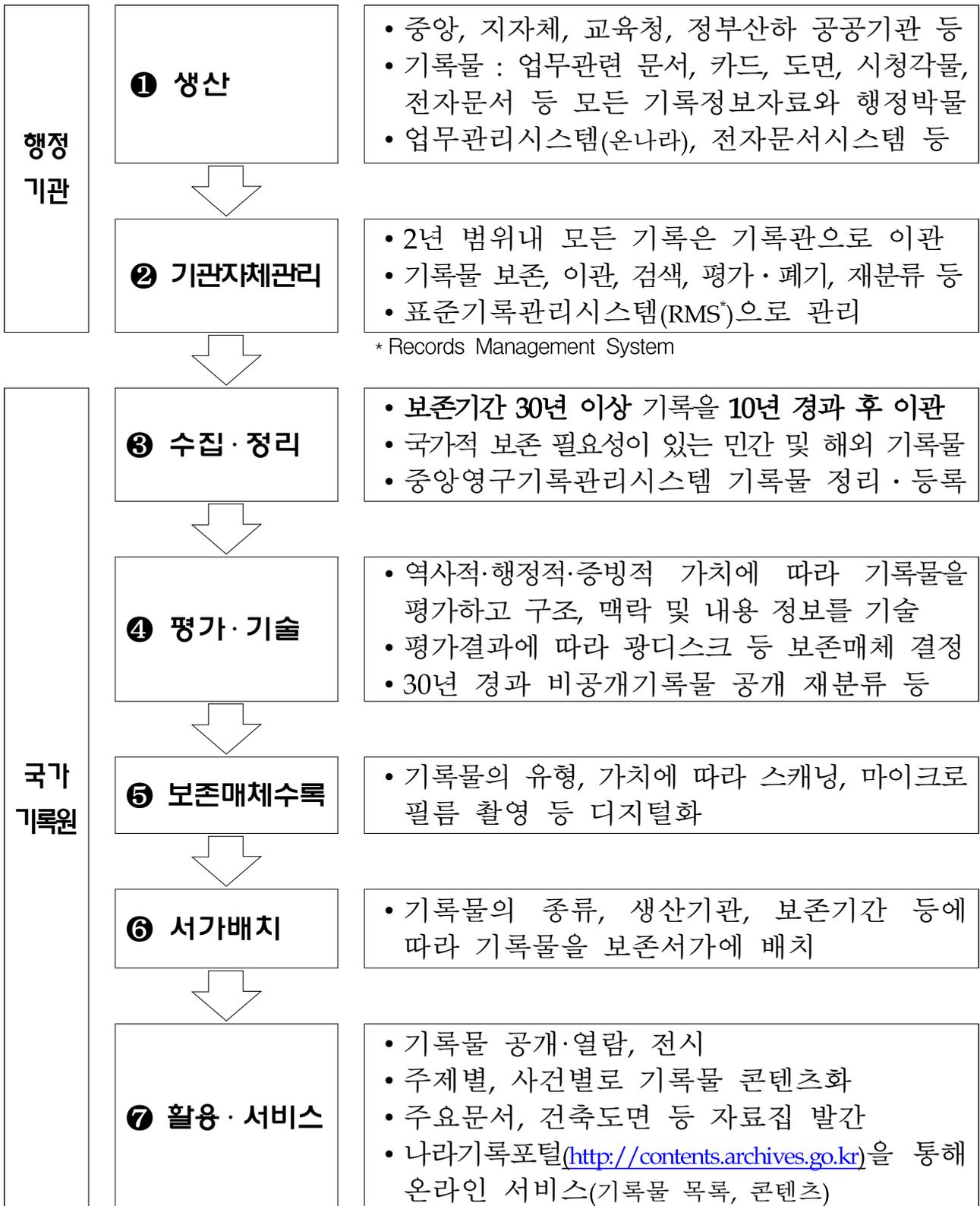


○ 최근 10년간 기록물 열람 대폭 증가 ('03년 13만건 → '12년 70만건)

○ 기록물 디지털화 및 온라인 서비스 확대로 열람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 예상

8

기록관리업무 흐름



주요정책 추진계획

1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한 기록관리체계 내실화

□ 정부 3.0을 뒷받침하는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

-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전자기록관리를 위하여 각 기관 업무관리 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의 연계 및 고도화 추진

※ 공공정보의 개방·공유를 통한 '정부 3.0' 구현의 기본인프라

- '15년부터 본격 이관될 전자기록의 관리 제도 마련 및 프로세스 개선

- 마스터플랜 및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, 차질없는 이관 준비
- '14년까지 시범 이관 실시 및 기록관리정보시스템(RMS-CAMS) 기능 개선

□ 각급 기관의 기록관리 전문성 및 인식 제고

- 기록물 생산단계부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문요원 배치 확대

- 중앙부처 소속기관에 3년간 124명 및 국·공립대학에 50명 배치 추진

- 법률상 의무사항인 17개 시·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·운영 지원

- 유희공공시설(폐교, 수련장 등)을 활용한 예산절감 등 행·재정적 지원 대책 마련

- 기록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분야별·수준별 맞춤형교육 운영

□ 대규모 정부투자사업 및 주요 국정과제 기록관리 강화

- **국책사업**(민자·예비타당성조사대상·총사업비 300억이상)의 전반적 진행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**사업별 기록물 통합 관리**

- 「'13년도 기록물관리 지침」에 반영하고('12.12) 관리 현황 지속 점검

-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기록물의 관리 강화를 통해 투명한 국정운영 지원

2 주요 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

□ 국가 주요정책 관련 기록물 적극 수집

- 정부기관 생산 기록물 26만여권 수집(13년도 목표)
- 국민안전, 재해·재난, 영유권 등 주요 이슈 선별·수집, 정책자료로 활용
- 세종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원 및 실태점검
- 수집 기록물 정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
 - ※ 일평균 고용인원 180여명 중 장애인, 여성기장, 다문화기장 등 사회취약계층 50% 고용

□ 민간기록물 기증 활성화 및 국가지정기록물 확대

- 기증자 예우 강화 등을 통해 민간기록물 기증 적극 유도
 - 기증캠페인과 연계한 언론·지하철광고, 「기증자의 날」 행사 개최 등
-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민간기록을 국가지정기록물로 관리
 - 독립운동가·문화예술계 주요인사(박경리 등) 등 지정대상 적극 발굴(5~6건)
 - ※ 유진오 제헌헌법 초고, 조선말큰사전 원고 등 8건 기 지정

□ 해외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기록물 수집 다양화

- 최근 비밀해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동구권 국가와 MOU 체결 확대
 - 체코, 세르비아가 보유중인 냉전시대 남북한 관련 기록물 수집
 - ※ 현재, 중국·러시아·영국 등 10개국 13개 기관과 MOU 체결
- 주요 역사적 사건 및 재외동포 관련 기록물 수집
 - 사할린한인·고려인(러시아, 일본, 카자흐스탄), 베트남전 기록(미국) 등

3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기반 구축 및 복원 강화

□ 기록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존체계 강화

- 대전서고 시설 노후화 및 안정성 저하에 따른 기록물 보존방안 마련
 - 대전서고 기록물을 (신축) 대전기록관 등으로 분산 배치(약15만권)
 - 동하절기, 대전청사 배관 노후화에 대비한 누수 경보 시스템 도입
- RFID(무선식별장치) 적용 확대를 통한 기록물 보안 강화
 - 소장기록물 약 8만권 RFID 태그 적용 및 무단유출방지 기능 강화
- 산불피해 방지를 위한 수막설비 본격 운영, 항온·항습설비 최적화

□ 보존복원센터 설치 등 기록물 보존·복원의 전문성 제고

- 훼손기록물의 과학적 보존·복원 처리체계 구축
 - 복원전문인력 확충(~'13년) 및 전담기구인 '보존복원센터' 설치('14년~)
 - 종이, 전자, 영상 등 기록매체별 보존·복원 R&D 강화
 - ※ 선진국의 경우, 「매체별 복원처리센터」를 설립, 관련 연구 및 전문적 보존복원 수행
- 국무회의록, 6·25작전지도, 지적원도 등 우선 순위 선정, 단계별 복원 추진

< 주요 기록물 훼손 현황 >



4 기록정보의 공유·활용 및 기록문화 확산

□ 온라인·모바일을 통한 기록물의 적극적 공개 및 활용

- '30년 경과 기록물의 공개원칙' 적용 등 비공개기록물의 적극적 공개
-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을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와 연계하여 기록정보 공유 서비스망 구축
- 나라기록포털과 SNS(페이스북) 등에 '이달의 기록', '오늘의 기록' 서비스 제공
※ '13년 이달의 기록 : 동장군(1월), 겨울스포츠(2월), 결핵(3월), 신불예방(4월), 어린이 안전보호(5월)

□ 소장기록물을 정책·학술·교육정보자료로 개발·제공

- 새마을운동, 경제개발 등 국정 주요 분야별 기록콘텐츠 제작, 정책 수립 지원
- 「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」 개발, 「국무회의 안건 목록집」 발간
-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록콘텐츠 개발·대국민 서비스
- 재난·재해, 생활안전 관련 기록물을 '이달(오늘)의 기록' 제공
- '연표와 기록(1945~1999)', '사진 대한민국' 등 생활상 관련 콘텐츠 개발
- 「독립운동 판결문 자료집」, 「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집」 등 학술자료 발간

□ 국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 확산

- 기록사랑마을 추가 지정을 통해 지역 사회의 기록문화 진흥
※ 정선군 함백마을, 보성군 강골마을 등 현재까지 7건 기 지정
- 정전협정 60년을 맞아 「1950년대 한국재건과 UN」 순회전 개최(6~9월)
- 대통령기록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'대통령기록 문화학교' 운영
- 다문화가정, 새터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기록문화 탐방 실시

5 국정최고기록인 대통령기록물의 적극적 수집·관리

□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및 수집체계 강화

- 대통령비서실(연설기록비서관실)과 상시적 협력체계 운영
 - 대통령기록물의 생산부터 이관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
- 독일 한인회 등 국·내외 민간단체 소장 대통령 관련 기록물 수집

□ 제17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후속 조치 추진

- 3차에 걸쳐 17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완료(2.25)
 - 이관 기록물의 검수·목록 정리, 전직대통령 온라인열람서비스 제공(하반기)
 - ※ 18대 대통령직인수위 기록물 이관 완료(3.15)
-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등록, 서비스체계 구축 및 열람 제공(하반기)

□ 대통령기록관 건립

- '15년 개관을 목표로 세종시에 대통령기록물 전용서고 건립(4.18 착공)
 - 완공 후 현재 성남 나라기록관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세종시로 이전
 - ※ 추진체계 : (행복도시건설청) 사업주관 / (국가기록원) 자문 및 전시관 조성

■ 대통령기록관 조감도



6 기록관리 국제협력 확대

□ 「2016년 ICA*(국제기록관리협회) 서울 총회」 개최 준비

* ICA(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) : '50년 창립 / 195개국 1,500회원 / 4년 주기 총회

- 2012년 호주 총회 및 각종 국제행사 사례 분석, 로드맵 마련
-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개최준비기획단 구성·운영 추진(하반기)

《 '16년 ICA 총회 개요 》

- 일시/장소 : '16. 9. 5일부터 5~7일(예정) / 서울 코엑스
- 참가인원/소요예산 : 3,000여명(130개국) / 38.5억원
- 총회주제 : “Archives, Harmony and Friendship”(아카이브즈, 조화와 우애)
- 행사내용 : 본회의, 집행위원회, 세션별 회의, 13개 지부, 13개 분과 회의 등

□ 기록관리 국제교류 활성화

- ICA 프랑스 집행이사회, 총회 준비 프로그램위원회 참석(3.12~17)
 - 2016년 ICA 서울 총회 로드맵 및 MOU 문안 논의
- EASTICA* 중국 총회·집행이사회 참석 및 주관(8~9월중)
 - * EASTICA(East Asian Regional Branch of the ICA, ICA동아시아지부)
- 이란 국립도서기록관과의 MOU 체결(6월중)

□ 개도국 대상 국제기록관리 프로그램 운영

- 국제기록문화유산관리과정 운영(KOICA 및 외교통상부 협조, 3개년)
 - 베트남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선진기록관리시설 및 프로그램 소개
- 개별국 대상으로 맞춤형 기록관리 국제연수과정 신설·운영(10월, 모잠비크)